

선거부정, 복지 먹튀, 공안 탄압, 민영화 추진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박근혜가 처낸 '국정원 게이트' 특별 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을 가동했고, 국정원은 곳곳에 '땃글'을 달았다.

국가보훈처는 '반종북' 교육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긴급 통화를 해 가며 관련 수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이제는 국방부의 '트윗' 공작까지 드러났다.

국가기관과 집권당이 총출동했고, 국정원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드러났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 전단을 이끈 이종명 모두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 민군심리전부 소속이었다. 국가보훈처의 반공 특강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강사로 나섰다.

'오빠 MB스타일' 같은 엽기 영상을 국정원과 국방부, 십알단 등이 서로 추천하며 퍼날랐을 것이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2011년에 국방장관 직할부대로 삼은 장본인이 지금 국방장관인 김관진이고, 이 부대 사령관이던 연제욱은 박근혜의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됐다.

이 사례들은 박근혜가 총체적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게다가 윤석열은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넣어 왔다고 폭로했다. 정치공작의 실행뿐 아니라 은폐와 물타기도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온 것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은 '이제는 대통령 사과로 끝낼 때가 지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소심하던 민주당과 문재인조차 '불공정 선거'를 말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해 가면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지금 사라져야 할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다.



반동 공세 속에서도 불거지는 우파 균열

'국정원 게이트'로 드러난 추악한 보수대연합의 목표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확실히 밀어붙이고, 동아시아 긴장 상황에 강경 대처할 강성 우파 정권의 재창출이었다.

최근 복지·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뒤엎고 공안 마녀사냥,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밀어붙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존재 이유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정치공작의 실체가 드러나도 박근혜는 모르쇠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정권의 정통성이 결렸을 뿐만 아니라, 선불리 꼬리 자르다간 우파 결집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사과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키우냐라는 일부 우파의 불평을 들으면서도 채동욱 짝어내기 등 무리수를 둔 이유다.

그런데 역설이게도 이런 대응이 국가기

관 내부에 연달은 공개 항명과 균열을 냈다. 특히 특권우파 집단 검찰에서 균열이 일어난 것은 의미심장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편을 들고 나선 것도 시사적이다.

공개 항명

이것은 박근혜의 '유신스타일'이 '유신체제'를 부활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와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내부 균열이 암투에 그치지 않고 외부로 드러난 것은 아래로부터의 압력과 연관 있다. 지난 몇 달간 지속된 촛불운동은 비록 많은 한계를 보였지만, 우파 내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정치적 효과는 냈다.

그래서 박근혜는 우파의 기대와 달리 '한국의 대처'가 되기 힘들어 보인다. 당장 박근혜는 협박에 굴하지 않은 전교조 조합원 69퍼센트에게 한 방 먹었다.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에서 12년 만에 민주당이 당선한 것, 6년 만에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도 힘 나는 소식이다.

물론 박근혜는 또 책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다. 공안 탄압과 마녀사냥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지체 없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러나 복지 먹튀 속에 9월 하순 이후 박근혜 지지율은 하락 추세다. 전교조처럼 우파 공세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노동자·민중이 늘어날수록, 우향우 정책이 지배계급 안에서도 무리수로 비춰지고 균열이 더 깊은 분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참가합시다!

<p>총체적 대선개입 규탄!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17차 범국민 촛불집회 11월 2일(토) 오후 6시 장소 미정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p>	<p>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영화-연금 개혁 저지 비정규직 철폐 민주주의 파괴중단! 노동탄압 분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주최: 민주노총</p>
<p>11월 9일(토) 저녁 7시 여의도 문화마당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p>	<p>11월 10일(일) 오후 1시 서울시청광장 전국노동자대회</p>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

연가 파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은 전교조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그 이유를 댔다. “신관권선거”로 당선한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적반하장격 흰소리다.

박근혜는 진작부터 전교조에 적대적이었다. 박근혜는 2005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전교조를 “은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해충”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생과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와 참교육을 지켜왔다. 진정한 해충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다.

따라서 전교조의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내부의 적”인 전교조와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굴복시키고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계급에 떠넘기려 한다.

그러나 압도 다수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정권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69퍼센트 조합원들이 비록 합법적 지위를 빼앗기더라도 명분을 얻고 노동자 운동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택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에 감동하고 경의를 표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최후통첩을 한 직후 9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가 거부 입장을 결정하고, 정부가 설정한 10월



무릎 꿇기를 거부한 전교조 조합원 69퍼센트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줬다.

23일까지 연가 파업 등의 투쟁을 건설하는 게 옳은 길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국 곳곳에서 많은 전교조 활동가들이 전력을 다해 거부표를 조직하며 이런 부족함을 메웠고, 결국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감동과 경의

전교조 지도부는 이제 총투표로 드러난 조합원들 다수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계획을 내놔야 한다. 투표 결과는 통일된 행동으로 승화시켜야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가 될 것이다.

물론, 전교조는 법적 제약 때문에 파업이 쉽지 않다. 또, 하루 이틀 연가 파업으로 법의

노조화를 당장 철회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단체 행동을 통해서만 전교조가 정부 탄압에 맞서 일사분란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가 파업은 필요하다. 법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어떤 자신감 상태에서 법외노조 상황을 맞이하느냐도 중요하다.

전교조가 파업을 벌인다면 연대 단체들도 거리로 나오고 전교조 지지·방어 투쟁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에 연대 파업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투쟁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또 다른 전선에서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에 맞선 대중 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근래 민주당은 ‘신야권연대’를 제안했다. ‘종북’으로 몰린 통합진보당을 빼고 야당과 NGO 등이 연합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를 환영했고, 이는 국정원 개혁안 공동 발의라는 정책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강성 우파 정부 시대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물리치려고,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거나 비판적 투표를 하는 불가피한 타협을 아예 달아 둘 수는 없다.

그러나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이미 이명박 정부 아래서 연립정부까지 염두에 둔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를 추구하다가 독자적 투쟁과 요구마저 종속되는 실패를 겪었다.

당시 진보운동 지도자 다수는 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을 위해 노동운동의 요구를 삭감하고 계급투쟁 방식을 회피하려 했다. 이것은 진보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진정으로 왼쪽의 목소리를 대변할 세력이 약해지면서 박근혜의 우파 결집을 뒤흔들기는 더 어려워졌다. 결국 계급연합 ‘전략’은 선거에서마저 박근혜 당선을 막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게이트’ 촛불이 기회를 놓쳐 온 것도 민주당에 너무 의존하려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시늉만 하다가 백기투항 식으로 국회로 들어가 버렸고, 촛불은 뒤통수를 맞았다. ‘내란음모’ 사건 때는 새누리당과 손잡고 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와 분열로 약화된 진보정치 세력은 박근혜의 약점과 민주당의 무능을 전혀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신야권연대’에서 배제된 통합진보당이 말하는 ‘범국민전선’도 친자본주의적인 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계급연합 방식으로는 반동적 방식으로 지배계급 일반의 이익을 지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세를 막기 힘들다.

노동운동은 총체적 정치 공작에 맞서 강력하게 단결 투쟁하면서 민영화 반대, 복지 확대, 전교조 탄압 반대 등의 요구와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계속되는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야 한다

얼마 전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 수당과 자료 제출 권한을 박탈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공동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는 ‘통합진보당 해산’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자들은 이석기 의원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마녀사냥 우려먹기에 여념 없다.

지금 우파한테 ‘종북 마녀사냥’은 지배자들의 균열을 막을 탈출구이자 무기인 것이다. 우파 마녀사냥에 조력자 구실이나 하는 민주당의 한심함도 여전하다.

이 상황에서 10월 22일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 한주희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등 해외 학자 대표단 5명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내란음모 혐의는 1987년 군사정권이 몰러난 이후 제기된 적이 없다”면서 “냉전시대 남용으로 악명 높았던 반공 논리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을 다시금

꺼내 들어 휘두르는 것에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성명에는 박노자 교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오언 밀러 영국 런던대 교수,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등 15개국의 한국학 학자 2백6명이 서명했다.

한편, 한국 재외 공관이 성명에 참여하려는 학자들에게 ‘이런 일 만들어 내지 말라’ 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폭로됐다. 특히 미국에선 우파 단체가 서재정

교수를 ‘종북’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자들은 용기를 내서 “한국 민주주의를 우려”하고 “한국인들에게 연대를 표하기” 위해 서명에 동참했다.

우리로 우파의 ‘종북 마녀사냥’에 맞서 “힘들게 성취한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공격에 굴하지 않고 해고자를 방어하고 대의를 지켰던 것처럼, 이간질에 흔들리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노동자와 쫓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레프트21〉 114호 주요기사

전교조 _ 법외노조 통보와 투쟁 과제 현대중공업노조 _ 좌파 당선의 배경 유럽 _ 파시즘의 부상과 저항
철도 민영화 _ 드러나는 거짓말과 위험 알렉스 캘리니코스 _ 치명상이 아물지 않은 자본주의

<http://www.left21.com>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left21@left21.com | 웹사이트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